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12.13.(화) 조간 (인터넷) 12.12.(월) 12:00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350)
		담당자	사무관	임채식 (044-204-7354)
			주무관	김하령 (044-204-735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천여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부담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3건 법제화 사전 차단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대폭 절감

□ 그 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개요 >

○ **(제도개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

○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총 34건의 의견 제출, 이 중 23건 반영 ('22년 1.1.~ 11.30.)	→	규제비용 절감	**38,731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연간 72,937백만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 기대
		규제비용 절감 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0,471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및 경영 불확실성 해소**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 미국 중소기업청 내 규제개혁실('22.4) : 2021 회계연도 규제유연성법 보고서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 사용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 (사례1) 위해성 있는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지정함은 타당하나,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전에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필요(수혜업체 : 9개사)

[현장 목소리] 통상의 사례와 벗어나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당국과 해당 기업이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

* (사례2)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수혜업체 : 689개사)

[현장 목소리] 해당 업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판단 외에 허가 이후 정기안전검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갱신제도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해외의 경우에도 총포 등의 제조업에 대한 갱신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❷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 (사례1)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 및 부과요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 제고(수혜업체 : 29,204개사)

[현장 목소리] 폐기물위탁 처리비용 외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기업의 부담이 되므로, 현행 감면기준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할 필요

* (사례2) 골재사업자에 대해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 등 지위승계 시 품질검사 신청 의무 규정 완화(수혜업체 : 약 900개사)

[현장 목소리] 골재 품질검사는 정기검사 외 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골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부담 가중

❸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 :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 (사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보관 및 교육 이수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수혜업체 : 약 77,000개사)

[현장 목소리]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직능이나 안전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교육이수를 추가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 **2022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사례**

①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 절감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피규제자		규제완화 내용
	업종	수혜기업(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갱신제도 신설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689	규제 신설 차단
통합허가대상업종 추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멘트 제조사업장	17	규제적용 제외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건축주	-	규제신설 차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강화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제조업체	9	규제 신설 차단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 보완 (농림부)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자	3,745	규제 신설 차단

②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피규제자		규제완화 내용
	업종	수혜기업(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 배출사업장	29,204	감면제도 현실화
항만용역업 통선의 여객보험 의무화 (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통선 사업자	90	시행시기 유예
품질검사 시기 및 골재채취업자의 변동사항 관련 의무 (국토부)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골재 채취업	900	규제 내용 완화
양돈농가 방역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양돈업	4,167	규제내용 완화
긴급정산상한가격 규정 신설 (산업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발전사업자	92,018	규제대상 축소

③ 규제내용의 명확화 · 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피규제자		규제완화 내용
	업종	수혜기업(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과기부)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77,172	서류작성 및 교육이수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의 설명·확인사항 추가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사업자	484,000	설명내용을 법령에 명확화

참고2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

□ 근 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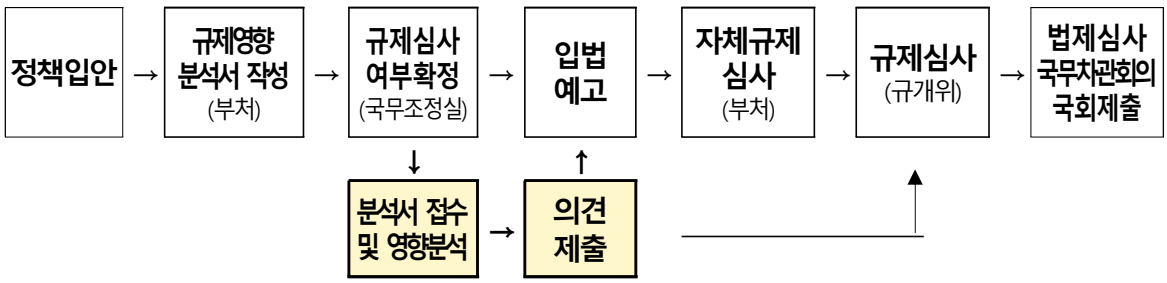
○ **(각 부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병행 분석해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해 국무조정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검토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공정거래위원회(경쟁영향평가),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영향평가)



□ '22년 주요 실적

○ ('22.11월말 기준) 심사건수는 885건 (34건 '의견있음' 제출)

* 의견있음(34건), 의견없음(655건), 해당없음(152건), 검토중(44건)

○ (수혜기업 및 비용절감액) 38,731개사, 729억원

* 비용절감 외 870,471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및 경영 불확실성 해소